

<제 643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ESG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6일 본점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이성욱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산하 지회 노동자들을 위한 ESG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산하 지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및 자산컨설팅 등 금융교육과 개인별 3천만원 이내의 자금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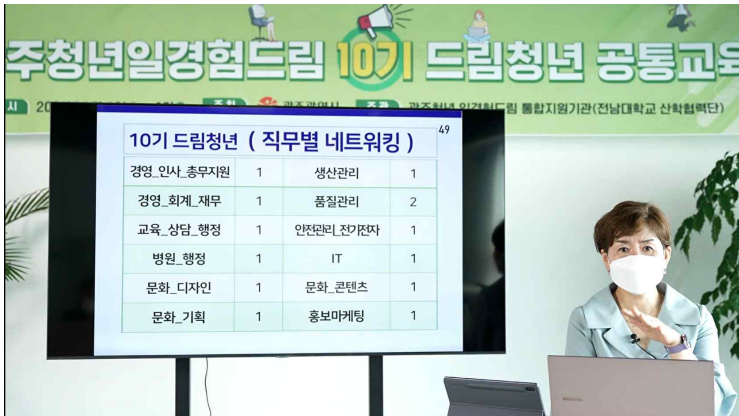
◆ 세계 3대 소금 가미한 '보해소주' 출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1일 바다에서 얻은 귀한 재료인 천일염으로 소주 특유의 쓴 맛을 잡은 보해소주를 이달 중순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순차적으로 입점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류회사들은 알코올 향과 쓴맛을 제거하려고 당을 활용했지만, 보해소주는 쓴맛을 단맛으로 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다.

보해양조는 '보석같은 바다'라는 뜻을 지닌 보해(寶海) 이름에서 착안, 바다에서 얻은 천일염을 새로운 소주의 재료로 활용했다. 세계 3대 소금으로 꼽히는 신안 토판염을 비롯해 히말라야 핑크 솔트, 안데스 레이크 솔트한 등을 최적의 비율로 가미했다. 특히 천일염에 포함된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쓴맛을 줄이는 동시에 소주 본연의 풍미를 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 10기 드림청년 공통교육>



본회 광주청년일경험드림은 지난 2~6일 5일 동안 동구 창업보육센터에서 10기 드림청년 비대면 온라인 공통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공통교육은 10기 기업형 드림청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zoom 화상회의를 이용해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일정 안내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공통교육을 수료한 드림청년은 9일부터 12월말까지 각 참여 드림터에 근무하며 현장에서의 일경험 통해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무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무국 일지 (08.02 ~ 08.06)	
08.02(월) * 광주청년일경험드림-기업형 10기 드림청년 공통교육(~6)	08.06(금) * 금요조찬포럼 휴강 (코로나19)
08.03(화) * 광주노사민정협의회 노사상생 릴레이 캠페인(~31)	

1. 노사 동향

■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집중

○ 고용부는 8. 4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7. 28)’에 실시한 제조업 끼임위험, 건설업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 발표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7. 1) 이후 매달 격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업장 안전 조치 의무 사항을 점검

※ 3대 안전조치 : ① 추락사고 예방수칙, ② 끼임사고 예방수칙, ③ 개인보호구 착용

- 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상 중 64.2%인 2,094개 현장에서 안전 조치 미흡이 지적됐고,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약 3,200여개의 현장에 대해 ▲ 제조업 등의 경우 끼임 위험요인(방호조치, 지게차 안전조치 등), ▲ 건설업의 경우 추락 위험요인(작업발판, 안전 난간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 고용부는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특히 불량한 사업장들에게 대해서는 집중 점검과 산업 안전보건감독을 통해 미비사항을 재확인한다는 계획

-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현장점검 이후 불시 점검(8월 中)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한편 고용부는 8. 2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재해 예방 목적의 현장 점검도 추진

- 고용부는 8월 말까지 안전보건공단, 민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을 포함한 6만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예정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집회 강행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8. 4)를 받은 가운데 민주노총은 10월 총파업 성사에 주력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8. 4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음.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차례(7. 4, 7. 9, 7. 11)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으며, 출석 과정에서도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방역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발언
-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의 경찰 출석에 앞서 8. 2 진보정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
 - ※ 참여 정당 :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 한편, 민주노총은 10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8. 23 임시대의원대회(온라인)를 개최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9. 11 ‘구조조정 저지, 일자리 국가보장’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투쟁 분위기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

■ 금융, 금속 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금융산업 노사간 교섭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중노위는 금융노조가 7. 13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8. 2)
 - ※ 중노위 조정신청(7. 13) → 제1차 조정회의(7. 21) → 제2차 조정회의 및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8. 2)
 - 금융노조는 임금 총액 기준 정규직 4.3% 인상 및 저임금 직군 8.6% 인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임금 총액 기준 0.9% 인상을 유지하고 있어 이견이 큰 상황
 - 금융노조는 8월 둘째주 지부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투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 한편 금속분야 산별교섭이 11차례 진행된 가운데 금속노조는 7. 27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산별교섭 타결 압박을 위한 8월 투쟁계획 수립

[참고] 금속분야 산별교섭 노사 입장 주요 내용

구분	노조 요구안	사측 제시안(6. 15)
금속산업 최저임금	▲ 통상시급 10,000원과 월 통상임금 2,260,0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	▲ 내부 의견 수렴 중
산업전환 협약	▲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실시 ▲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 공정거래 구조 마련 ※상기 사항은 노사 공동으로 결정 및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	▲ 추후제시(내부 의견수렴 중)
기후위기 대응	▲ 노사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환경 구축 시 비정규직 고용보장,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을 위한 대응책 수립	▲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정책 추진

- 금속노조는 8. 18 2차 경고파업(주야 4시간)을 진행하고 8. 24 중앙교섭 미타결시에는 8. 25부터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
※ 금속노조는 7. 21 1차 경고 파업(주야 2시간)을 진행한 바 있음.

2. 법제 동향

■ 고민정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19)

- (발의 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한 자녀 역시 육아휴직의 대상에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제도를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역시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양육부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차별 지적
- (주요 내용)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

■ 김주영 의원(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28)

- (발의 이유)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
- (주요 내용)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

■ 송석준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30)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

- (주요 내용)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허용되는 산업(현행은 운송업, 항공업, 보건업 등에 허용)에 연구개발업추가

■ 노응래 의원(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30)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조치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행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가 이 법이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
-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내역 및 조치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이수진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3)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의 조치의무 외에 별도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
- (주요 내용) 사용자의 조치의무에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후 구제 조치